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 긴급복지지원제도

1)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배경

2004년 대구 불로동 5세 어린이 아사 사건으로 위기사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제도 제정되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적

3)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포괄적으로 지원 필요성 판단하여 접수 후 3일 (72시간) 이내에 우선 지원 추후 지원의 적정성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 : 1개월 , 의료·교육지원 : 1개월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으로 2개월 연장 가능)

-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통해 추가 가능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지원 : 3개월,

의료·교육지원 : 1회 추가 지원 가능, 주거지원 : 9개월

- 지원 종료후 2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지원 불가능하며 다른 위기사유가 있더라도 지원종료 3개월 이내에 지원 불가능

•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률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에 연계

이런 경우 타법률에 의한 지원결정 전 → 우선적 긴급지원 가능

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 지원의 종류

① 직접지원 : 금전 또는 현물 직접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② 연계지원 : 민간기관 연계지원,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지원하거나 상담·정보제공

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1) 위기사유 (위기상황)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구원 간호·간병·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9.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 기준별로 기준이 다르다.
8인가구일 경우 1인이 증가할 때마다 655,191원 씩 증가
 - 재산 중위소득 75%이하
대도시 241백만원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이하, 농어촌 13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예외(주거지원) 800만원이하.
- 이 조건이 해당되는지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다.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1) 보건복지, 시·군·구, 시·도, 민간협력 단체의 역할

① 보건복지부

- 담당업무 : - 긴급지원 정책 개발
- 사업 지침 마련
 - 교육 및 홍보
 - 사업 모니터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지원요청이나 신고 받으면 해당 시·군·구에 연계, 처리과정과 지원현황 정보를 상담센터에 통보

② 시·군·구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중추적인 역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하고 지원요청 신고접수하여 현장확인 및 긴급지원, 사후조사 실시. 추가적으로 지원 연장 결정(2개월 이내)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지원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의결 : 재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

③ 시도 역할 : 긴급지원기관 조정

- 시장·군수·구청장의 긴급지원 기관 조정 요청시 예산확보 현황

- 긴급지원사업 실적 확인하여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의 지정여부 결정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긴급지원대상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시도지사는 기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검토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④ 민간협력체계의 역할 : 의사, 의료기관 종사,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조기발굴)하여 민간자원 연계 역할 -> 실질적으로 중요함

4. 긴급복지지원 종류

1. 주지원 : 생계, 주거, 의료, 사회복지시설 이용

부가지원 : 교육,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1) 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료품
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① 지원방법 및 절차

* 금전지원원칙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예외적 현물 지원 가능

-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경우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때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② 지원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정해진 액수로 지급

③ 지원기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원칙 : 1개월 선지원

연장지원 : 2개월 이내

지원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위기상황의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가능

2)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원

① 주거지원 금액

대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중소도시	290,300원	422,900원	557,400원
농어촌	183,400원	243,200원	320,300원
	1~2인	3~4인	5~6인

② 지원기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원칙 : 1개월 선지원

연장지원 : 2개월 이내

지원의 실효성, 행정절차의 간소, 서민생활 안정 -> 3개월 지원 우선 결정 가능

위기상황의 지속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 9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가능

3) 의료지원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지원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 ③ 자살시도자에 대한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 가능

① 의료지원 대상일 경우

- 의료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
- 동일 상병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
-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 상이한 상병일 경우
-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② 지원내용

의료서비스와 약제비 지원

의료지원은 퇴원 전 신청 원칙

입원 당시 유선전화, 팩스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퇴원후 신청이 가능

③ 순서

긴급지원 대상자 의료지원 신청→시·군·구청장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소요된 비용 지급

④ 의료지원의 5단계 지원절차

1. 의료지원 요청
 2. 현장확인 후 지원결정 통보
 3. 의료기관에서 진료, 처방약물 조제등 의료서비스 제공
 4. 소용된 비용을 시·군·구에 청구
 5.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기관 등에 비용지급
- 건강보험 지원 청구할 경우 G코드 입력 안내

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 지원불가항목 : 간병비, 의료기구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 급여화 된 상급병실 이용시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
- 시군구청장이 진단서 등을 통해 불가피한 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선별 급여의 형태로 지원 가능(감염 및 전염 사유 예외)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 지원 종료**
- **불가파하게 의료기관 변경 시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 후 지원 가능**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 ×**
- **시보험 가입자의 경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 긴급복지지원의 다른 지원들

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시설 이용실비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회복지 시설이용 1개월 지원가능하나 최대 6개월 연장지원 가능

② 기타지원

- 기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③ 교육지원

- 교육지원 대상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까지만 해당),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는 자녀 있는 경우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지원

5.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1)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위한 내용

①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암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지원사업 우선 연계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아니나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가능

② 지원내용

-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에 3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급여화된 상급병실 이용시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단, 감염 및 전염사유는 예외
- 지원불가항목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및 식대, 보호자 식대

③ 긴급의료비지원 절차



2) 노숙인 시설 종사자를 위한 내용

① 지원대상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한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 지원
- 임시거주지 마련, 사후관리

6.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위기가구 적극 발굴, 복지사각지대 예방하고자 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규정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